

2024년 가상자산감독 업무계획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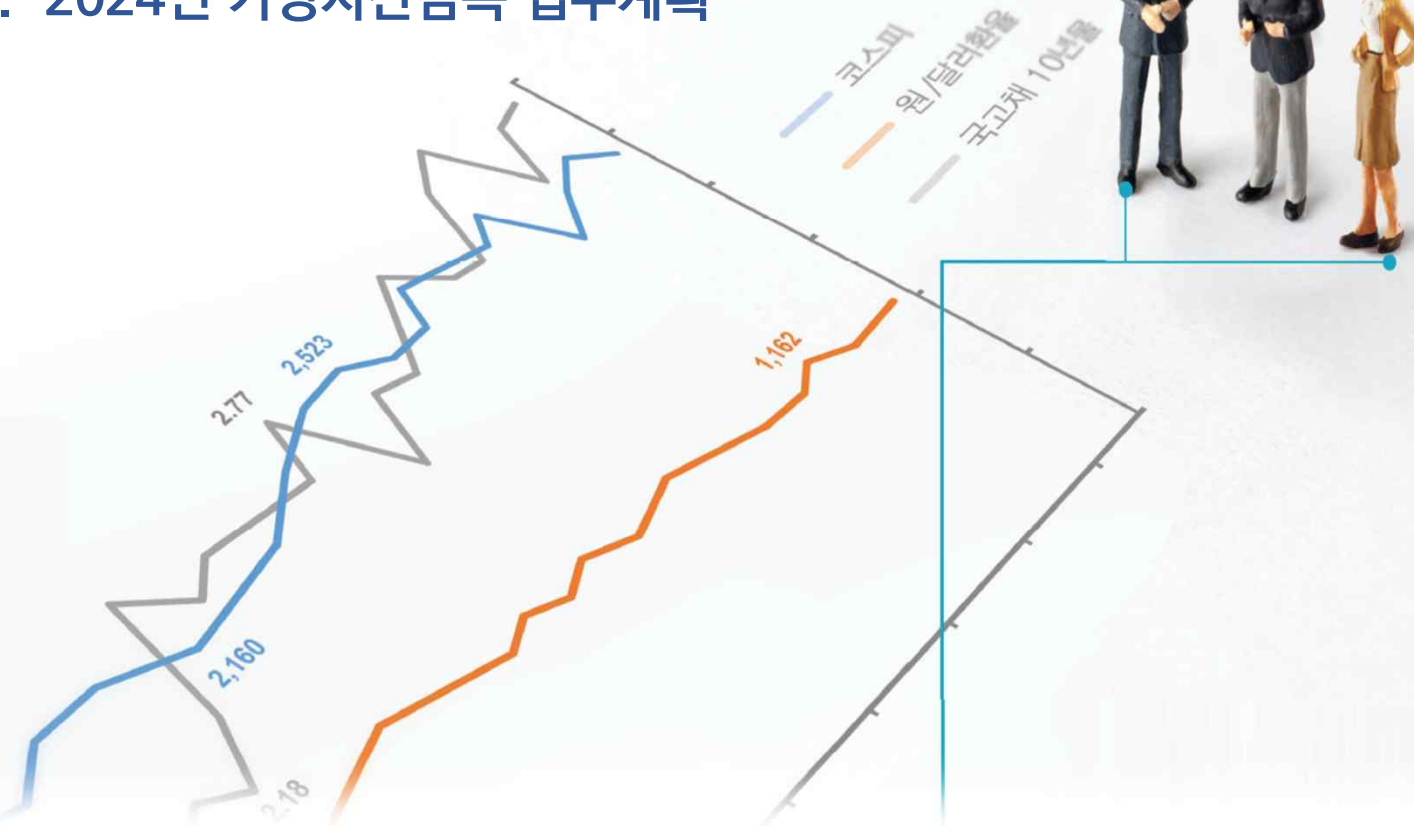
금융은 든든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2024. 3. 11.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 가상자산조사국

Contents

1. 대내외 환경
2. 가상자산산업 현황
3. 2024년 가상자산감독 업무계획



1 대내외 환경 - ①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주요사건

비트코인 출현 - Nakamoto Satoshi	2008. 10.
日, 세계 최초 코인거래소(마운트곡스) 출범	2010. 7.
이더리움 출시 (최초의 ICO 성공사례)	2015. 4.
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기준 발표	2019. 6.
EU,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최초 제안	2020. 9.
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기준 개정	2021. 10.
美 백악관, 디지털자산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 정부부처·연방 규제기관의 주제별 연구,보고 의무	2022. 3.
美 백악관,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2022. 9.
美 백악관, 암호화폐 리스크 완화 로드맵 발표	2023. 1.
美 FRB·FDIC·OCC, 은행 암호자산 리스크 경고	
美 실버게이트 은행·SVB 파산	2023. 3.
EU, 가상자산 규제(MiCA) 입법완료	2023. 4.
英, FSMA 개정 완료(스테이블코인 규제)	2023. 6.
FSB, 암호자산 활동 글로벌 규제방향 발표	2023. 7.
IOSCO, 암호자산 규제(CDA) 최종보고서 발표	2023. 11.
IOSCO, DeFi 규제 최종보고서 발표	2023. 12.

국내 가상자산시장 주요사건

2013. 4.	코빗 - 한국 최초의 코인거래소
2017. 12.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긴급대책 발표
2018. 1.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2021. 3.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2022. 3.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시행
2022. 5.	테라-루나 사태
2022. 9.	FTX 사태
2022. 12.	위믹스 상장폐지(유통량 위반)
2023. 2.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2023. 7.	가상자산법 제정(24.7월~)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 의무화(24.1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3. 12.	가상자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1 대내외 환경 - ② 가상자산산업 환경



깜깜이 상장 경종 울리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뒷돈 상장' 수사 ↑

[머니투데이] 가상자산 유명인 '스캠코인' 연루 빈발... 美·英처럼 규제 도입 목소리 [심층기획-제도권진입 앞둔 가상자산 구멍 여전]

'코인' 맛본 투자자,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ETF' 노린다

비트코인, 끝 모르는 고공행진?...9150만원 돌파, 또 최고점 경신 [컬처세상] 2020.11.11. '코인 몰빵' 신드롬 주의해

[기자수첩]'코인 선물 리딩방' 투자자의 눈물을 보며 "불붙은 투심 잡아라"...치열한 '코인러' 표심 경쟁

금감원, '가상자산법' 로드맵 공개..."이행 준비 철저히"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첫 간담회 "위법 사례 발견 시 엄중 대처할 것"

국힘, 가상자산 과세 부과 규제 기...

미주대...

檢,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 기소 "피해액 1조4000억"

...주 세계 수립이 먼저"



1 대내외 환경 - ③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7.19.부터 이용자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제2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제5조)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 이용자 예치금 보관의무

- 분리보관, 예치·신탁 의무
- 상계·압류, 양도·담보제공 금지
- 이용자에 대한 우선지급

(제7조)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의무

-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제8조) 해킹 대비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제9조) 거래기록 보존의무(15년)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금지

(제11조)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손해배상 포함)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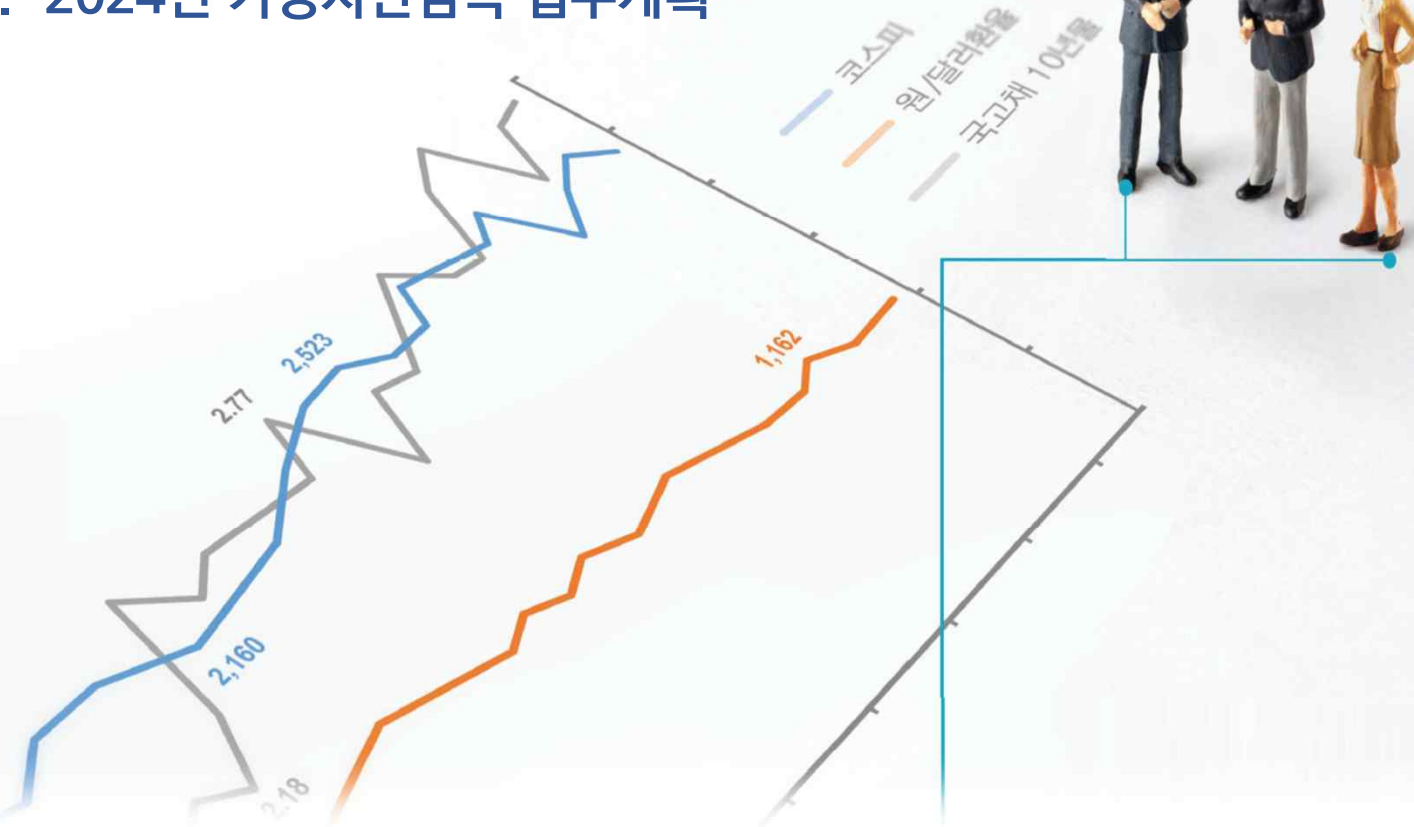
(제15조 등) 제재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 의견

1. 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문제 개선방안
2.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사고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대책
3.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방안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 개선방안
5. 거래소의 가상자산 유통량, 발행량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지원
6.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 내부통제 등 규정 마련
7.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금감원에 위탁
8. 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 관련 내부통제, 투명한 절차 마련을 지원

Contents

1. 대내외 환경
- 2. 가상자산산업 현황**
3. 2024년 가상자산감독 업무계획



2 가상자산산업 현황

- ▶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7사 (원화 5사, 코인 22사, 지갑보관 10사)
- ▶ '23.6월말 기준 원화·코인마켓사업자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8.4조원
 - 일평균 거래금액은 2.9조원, 원화예치금은 4.0조원
 -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 수는 622종,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06만명 수준
- ▶ '23.6월말 기준 지갑·보관사업자의 총 수탁고는 3.1조원
 - 법인 122개사, 개인 30.3만명이 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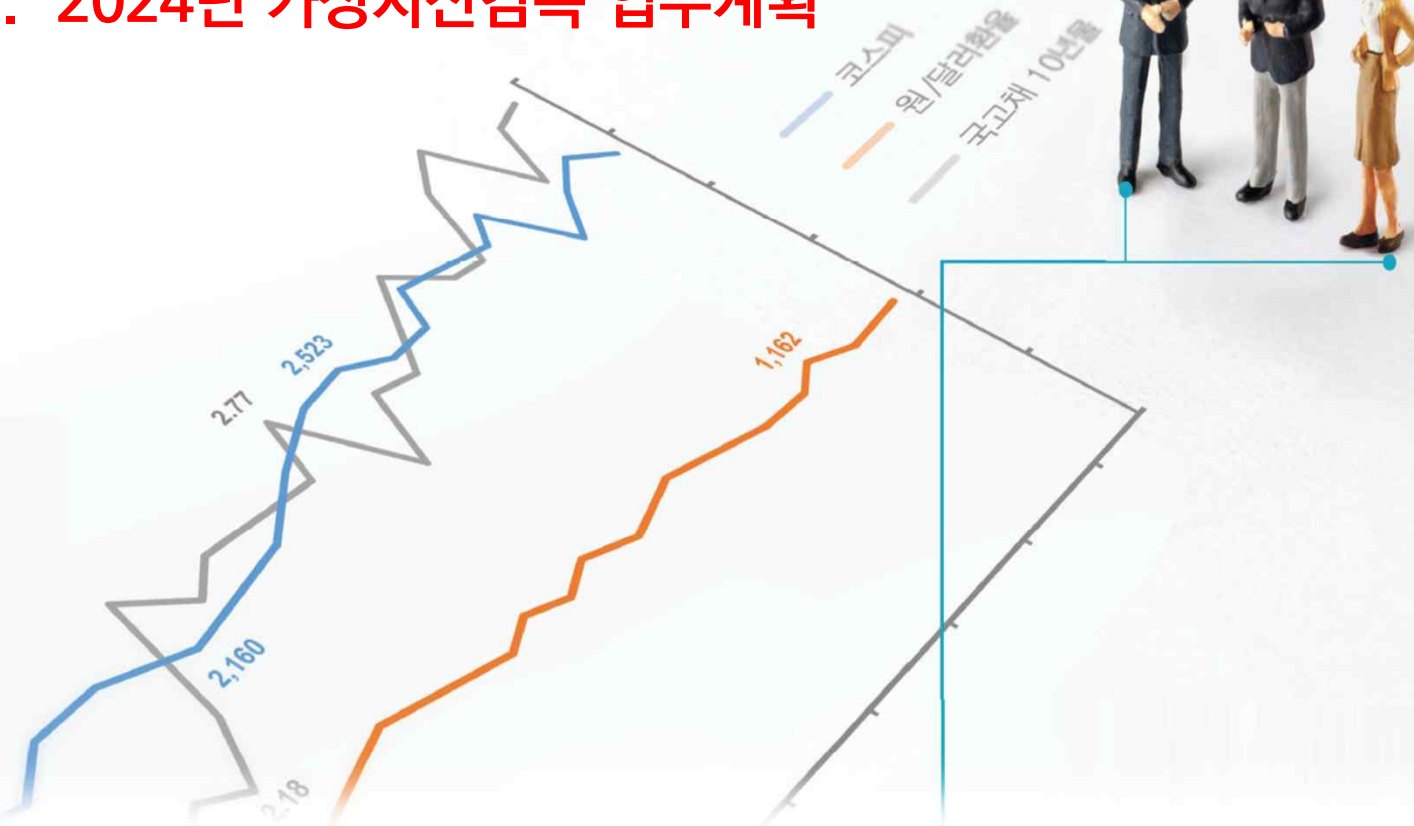
[출처 : FIU]

	'21년말	'22.6월말	'22년말	'23.6월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조원)	55.2	23.0	19.4	28.4
일평균 거래금액 (조원)	11.3	5.3	2.9	2.9
원화예치금 (조원)	7.6	5.9	3.6	4.0
국내 유통 가상자산 수 (종)	623	638	625	622
국내 이용자 등록계정 수 (천개)	15,254	13,095	11,776	9,495
실제 이용자 수 (천명)	5,584	6,900	6,272	6,061

주) 일평균 거래금액은 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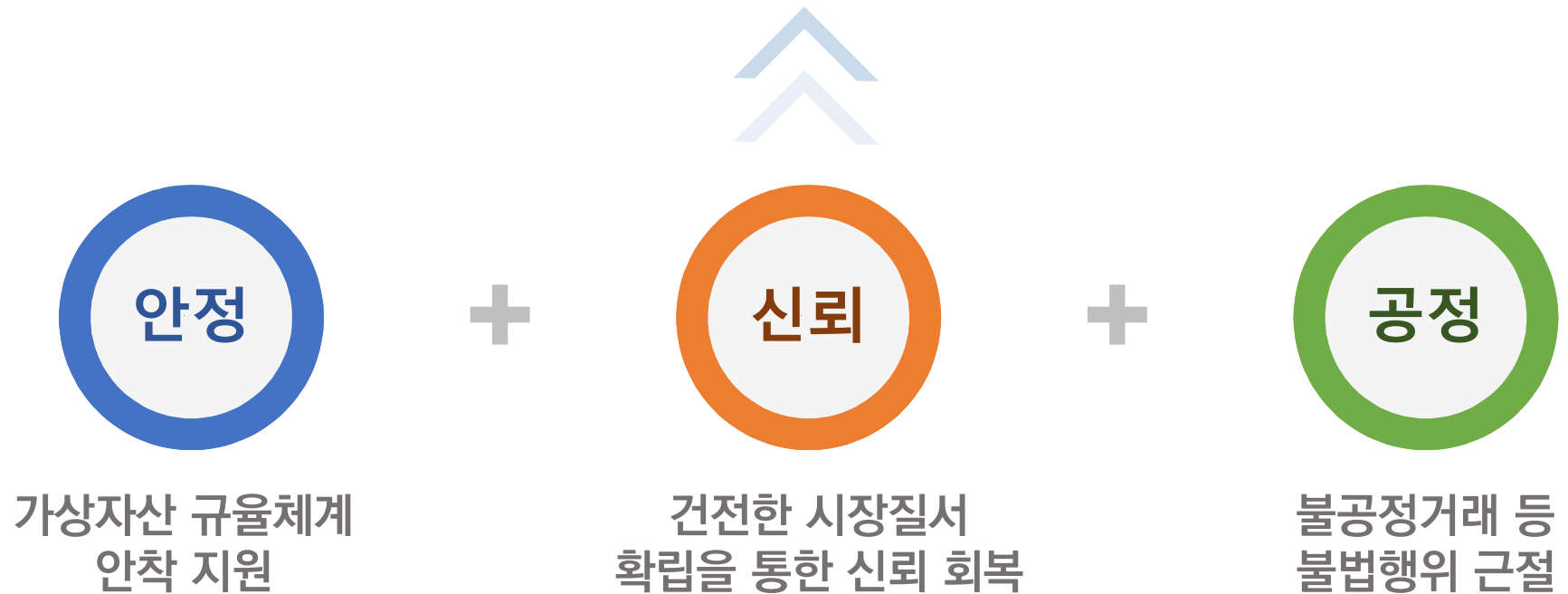
Contents

1. 대내외 환경
2. 가상자산산업 현황
3. 2024년 가상자산감독 업무계획



Vision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



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규제이행 준비 지원

- ▶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roadmap) 제시
-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점검(self-assessment) 지원
 - 규제이행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 제공, 이행계획 주기적 확인
- ▶ 현장컨설팅 실시 (희망 사업자 대상)
 -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자 준비상황 확인, 사업자별 맞춤형 정책자문 제공
- ▶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를 통한 최종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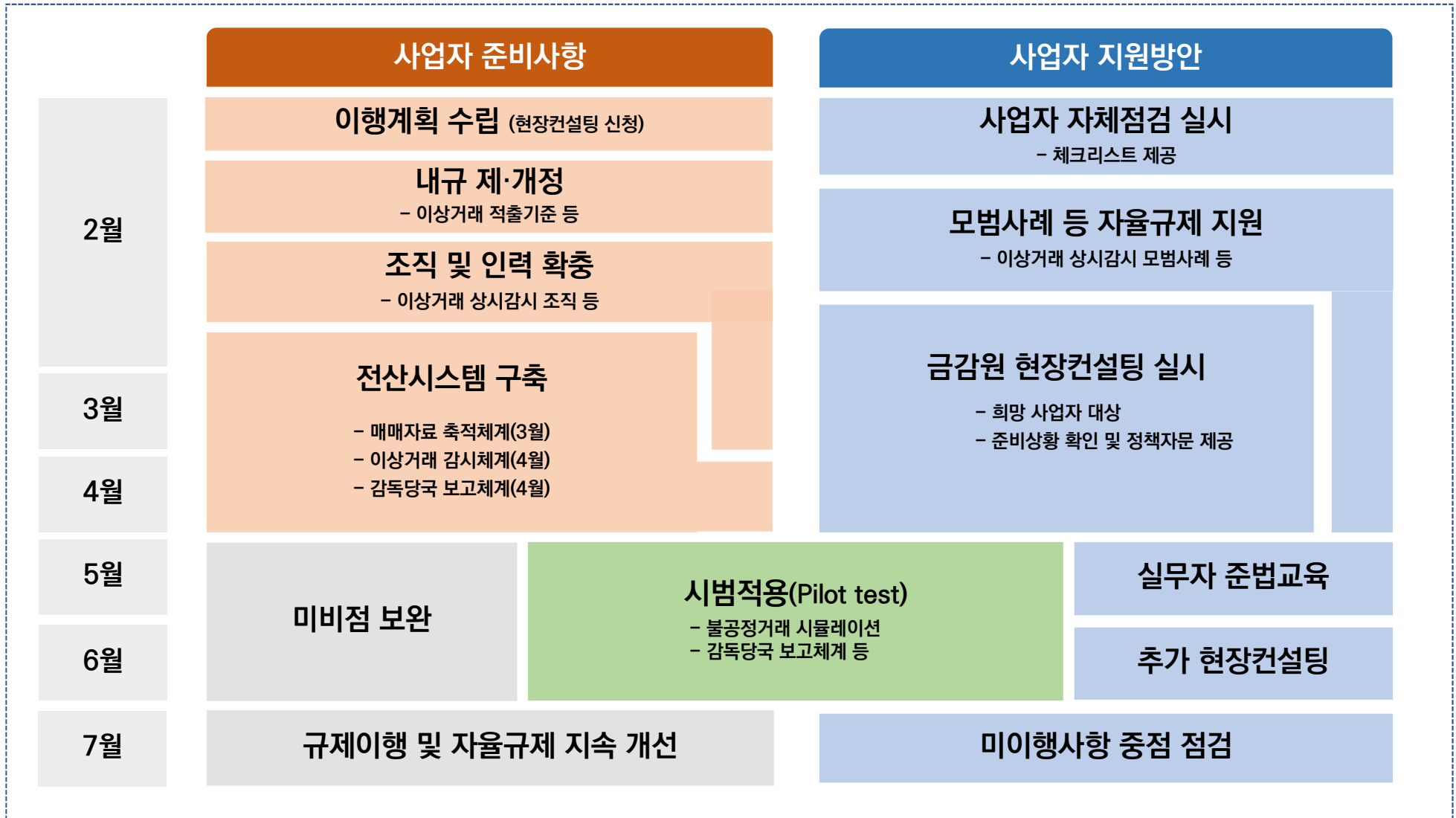


②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및 지원

- ▶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을 통해 규제 현안 대응
- ▶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지원
 - 국회·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
- ▶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정합성 도모 (IOSCO, FSB)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roadmap)



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독방안 수립

▶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시장 변동성,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시장정보(market data) 분석방안 마련
- 사업자별 재무·영업현황 분석 등을 위한 보고서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자정보(VASP data) 관리방안 마련

▶ 시장 자율규제 강화 유도

▶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심사

- FIU와 협의하여 갱신신고 심사방안 마련, 신고심사 매뉴얼 개정 및 사업자 안내



② 효율적인 검사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 가상자산 사업자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감안한 IT 부문 등에 대한 검사매뉴얼 마련 및 검사기법 개발

▶ 리스크 중심(Risk-Based) 검사 실시

- 중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 이용자보호 수준 등을 반영해 검사주기 탄력 조정
- 이용자보호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 사업자의 사익추구 행위도 집중 점검



①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인프라 구축

-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에 필요한 조사시스템 마련
 - 오프체인 자료 입수 및 사건관리 시스템, 온체인 이상거래 감시 및 거래추적 시스템
- ▶ 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및 조사업무매뉴얼 마련



② 선제적 감시 및 중요사건 신속조사

- ▶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신고센터'를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를 위한 통합 창구로 확대
 - 피해사례, 유의사항 상시 안내 및 다중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 ▶ 상시적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대상종목 선제 발굴
- ▶ 긴급·중대사건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



③ 유관기관 간 불공정거래 협업체계 구축

- ▶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체계,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 지원
- ▶ 감시·조사·수사기관(검·경) 간 협력프로세스 정립

